

의제 합의 불발... 영수회담 일정 '안갯속'

소득 없이 끝난 대통령실-野 2차 준비회동 민주 '의제 검토 결과 제시도 안해' 정부 "25만원 지원금 적절치 않다" 3차 실무진 준비 회동 일정 미정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 협상 등을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한 뒤 국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사전 조율을 위한 2차 준비 회동에 나섰으나 별 소득 없이 끝나며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2차 회동을 갖고 약 40분간 논의를 이어갔다.

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

의 검토 의견을 기대하고 회의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수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날 회동에서 확인한 대통령실) 검토 입장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영수회담에 올라갈 의제 범위와 관련해 천 실장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실시한 1차 실무진 회동에서 논의된 의제 외에 추가 논의된 의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회동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인선 협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후 3차 실무진 준비 회동 일정은 미정이며,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과의 논의 내용을 당 지도부와 상의해 대통령실과 영수회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한별 기자

조국혁신당 1호 발의 '한동훈특검법' 속도

황운하 원내대표 "민주와 논의 시작" 투톱 사법 리스크에 법원 판결 귀추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 野 반대 입장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황운하 의원은 25일 당이 1호 발의 법안으로 내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인 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민주당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에 민주당 내에서 이를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범야권 연석회의라는 형식을 갖추든 안 갖추든 이 대표가 실제 영수회담 전에 다양한 경로로 범야권에 포함되는 여러 정당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현재는 20석 이상) ▲8명의 국회의원을 추가로 확보해 공동교섭단체 구성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대표도 현재 12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같은 '투톱 사법 리스크'를 갖게 된 조국혁신당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당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조 대표나 저나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충실히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어떤 법원의 판결이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은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준비해서 당에 보내준 유권자들의 지지를 충실히 반영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가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넌클라베'를 통해 선출됐다. 그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해오다 총선 직전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비례로 재선에 성공했다.

김한별 기자

"당 전략적 오판·정부 안일한 태도에 '총선 참패'"

국힘, 총선이 남기 과제들 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원 용산 책임 날선 비판 보수정당 취약 40대 전략 無 지적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용산 책임론과 당의 선거 전략 부재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당의 전략적 오판과 대통령실의 안일한 태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권의 대표적 현자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기를 잡은 김재섭 당선자는 "당이 하는 것의 반대로만 했다"며 중앙당에서 집중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 등을 걸지 않았다고,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김종

혁 전 조직부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국민 평가를 가감 없이 전하며 "우리는 PI(President Identity, 대통령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국민께 사과-대과-양과 가격이 올라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수도권과 지난 20여 년간 보수정당이 가장 취약한 세대인 40대를 향한 전략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토론회 좌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국민의힘은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 됐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배종찬 인사이드 케이 연구소장은 국민 의힘을 '경포정(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꼬아냈다. 경기도 국민의힘 의석은 ▲

제18대 32석 ▲제19대 21석 ▲제20대 19석 이었는데, 제21대(7석)와 제22대(6석)에 들어 가하급수적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배 소장은 "2022년 대선에는 바람을 타고 열령뿔뿔이 이겼지만 당장 시급하게 2년 뒤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경기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우리 당이 지난 20여 년간 가장 취약했던 40대에 대해 정밀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홍 원장은 "지난 2002년 (제20대)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와 비교해 32% 대 62%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당시 20대였던 현재의 40대 전국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32% 대 민주당 63%"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들 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김한별 기자

이재명 제안에 조국 OK... 비공개 만찬 성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배석자 없이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만찬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목소리가 내기도 했다.

이유림 기자

민주연합 합류 군소정당 당선인 4인 '원대복귀'

민주 합당 반대에 민주연합 제명 김남국 의원, 1년 만에 민주 복당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에 합류했던 군소정당 소속 당선인 4명이 25일 각자 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절차를 마쳤다.

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한 용혜인-정혜경-전종록-한창민 당선인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정혜경-전종록 당선인은 진보당, 용혜인 당선인은 새진보연합, 한창민 당선인은 사회민주당에 각각 복귀한다.

상임위원회 회의 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지난 달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지난 달 민주연합에 입당, 비례 의원으로 당선돼 1년여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됐다.

김 의원은 전날 SNS에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별 기자

일상에서 만나는 경기신문! 이제 가판대에서 만나보세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지의 버스정류장, 세븐일레븐, GS25, CU 등 400여곳 가판대에서 판매중

